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재정정책정보지

# 세종재정

2024. 2

2024년 첫번째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본 정보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최근 중앙부처와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지방재정 연구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이슈 등을 파악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보지 개선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더 심도 있는 자료 작성 및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CHAPTER. I

### 재정분석

유바리·버밍엄시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이 주는 시사점	05
2024년 나라살림 재정 개요	09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개요	12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개요	16

## CHAPTER. II

### 재정이슈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지방재정 부담 완화	20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1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23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24
재정 뉴스	26

## CHAPTER. III

### 재정정책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30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 재정 간 연계 방안 모색	33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성 분석	35

## CHAPTER. IV

### 경제동향

최근 경제동향(기획재정부)	38
월간 재정동향(기획재정부)	39
KDI 경제동향(한국개발연구원)	40
KDI 경제전망(한국개발연구원)	41
경제전망 요약표(한국은행)	42
NABO 경제동향(국회예산정책처)	43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44

## CHAPTER. V

### 재정통계

주요 경제지표	46
세종시 주요 통계	48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50

# I. 재정 분석

## 요 약

- [유بار리-버밍엄시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이 주는 시사점] 유بار리시와 버밍엄시의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024년 나라살림 재정개요]
  - ▶ 2024년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3.5조원 감소한 625.7조원
  - ▶ 2024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638.7조원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개요]
  - ▶ (예산) 전년도 본예산 2조 28억원 대비 △968억원(△4.83%) 감소한 1조 9,059억원
  - ▶ (기금운용계획) '23년 당초 계획 대비 △2,466억원(△49.26%) 감소한 2,539억원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개요]
  - ▶ (예산)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원 대비 446억원(4.2%) 증가한 1조 1,061억원
  - ▶ (기금운용계획) '23년 당초 계획 대비 △2,005억원(△37.0%) 감소한 3,407억원

# 01. 유바리·버밍엄시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이 주는 시사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I. 미래성 위에 서있는 위기의 지방정부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영속할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용인 경전철의 판례를 계기로 영국 버밍엄시 파산, 더 나아가 일본 유바리시 파산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난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미래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요즘같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고, 일부 지자체는 존립 위기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몇가지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일본 유바리시와 영국 버밍엄시, 그리고 용인 경전철 사업

### 1) 일본 유바리시 파산

일본 홋카이도 중부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탄광과 멜론으로 유명하였으나, 이제는 ‘파산’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한때 인구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석탄산업의 쇠락과 더불어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선언을 하며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유바리시는 석탄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전성기인 1960년대에는 약 11만명까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인한 폐광으로 1970~80년대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다.

도시의 쇠퇴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석탄박물관, 동물원, 놀이공원, 스키장, 호텔, 영화제 등 대대적인 관광산업을 전개

하였다. 초기에는 성황을 이루며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버블경제의 붕괴와 관광패턴 변화, 차별성이 없는 콘텐츠 등으로 외면받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수익성 악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6년 일본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유바리시는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채는 350억엔(3500억원)이었으며 오는 2027년에야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산 이후 공무원은 1/3수준으로, 시의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봉급도 줄고 심지어 시의원 임기도 반으로 줄었다. 40개에 달했던 초·중·고교는 각각 1개교씩만 남았다. 지방세 등이 모두 인상되어 세금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 되었다. 공공시설도 운영 중지, 통폐합되었다. 당연히 인구감소가 뒤따랐다. 2024년 현재 유바리시 전체 인구는 6,300명 수준으로 단기간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1위 지역이 되었다.

유바리시의 파산은 리더의 경영실패와 독재경영,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력, 포퓰리즘식 행정비용이 부채와 파산으로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어 삶의 질 저하와 지역소멸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이다. 또한 재정파산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주민과 시의회 등 감시와 견제의 부재 또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석탄 역사촌 테마파크】



【유바리시 부채시계】

夕張市の借金時計 再生이체 특례채만

- 再生이체특례채상환 종료년월은  
**2027**년 **3**월입니다. 앞으로 **1135**년 일입니다.
- 부채 시계의 현재 시간은  
**2024**년 **2**월 **20**일 **17**시 **27**분 **33**초입니다.
- 유바리시의 시채 (빚) 잔액은  
**77**억 **4400**만 **9586**엔 일입니다.
- 상환한 금액은  
**275**억 **8933**만 **8413**엔 일입니다.

※재정 재건 계획 기간에 상환한 액수 31억 3,388만 2천엔을 포함합니다

2) 영국 버밍엄시 파산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유럽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인구 110만여명의 버밍엄시가 2023년 9월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버밍엄 시의회는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폐기물 처리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금지하는 ‘섹션 114’ 통지를 발령했다.

버밍엄 시의회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이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원)인데 이 중 8700만 파운드(1459억원)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런 판국에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1조 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어 파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의 패배가 버밍엄 파산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시기만 늦어졌을 뿐 파산은 막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파산으로 도미노 붕괴 위기에 직면한 영국 지방정부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미 크로이든과 워킹 등도 파산 선언을 하였으며, 영국 47개 도시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협의체는 앞으로 26개에 달하는 시의회가 2년 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자체도 영국의 지방도시들이 줄줄이 파산 선언하는 것을 마음놓고 볼 수만은 없는 처지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등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다. 세수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영국처럼 우리나라 지자체가 사실상 파산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요즘 국내 언론에도 연일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우려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굶직한 현안사업이 재정난으로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으며, 줄어든 국비와 교부세에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들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자체 파산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재정위기가 지자체의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파산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3)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최근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사업을 시작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고 재판장은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부터 용인시가 추진하던 사업이다.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상 수요 13만 9000명’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전 시장은 2004년 실시 협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3년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 수는 예측했던 숫자의 5~1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약 4293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지급했다.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용인 시민들은 2013년 주민소송을 냈고 10여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다른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무리한 사업을 남발하는 건 실패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위법만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었던 행정적 과오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엉터리 수요예측에 기반해 세금을 낭비하는 치적 쌓기용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I. 시사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공행정은 더 이상 어떤 경우라도 망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며, 재정난과 실패한 정책이 쌓이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허술한 사업들은 나중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은 현세대에 그치지 않고 훗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물론 세종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리 없겠지만 실패한 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유바리시와 버밍엄시의 파산, 용인 경전철 판결은 무리한 개발사업과 리더의 경영실패, 포퓰리즘식 행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판단 없이 지방재정을 함부로 쏟아붓는 포퓰리즘, 전시행정에 보내는 경고이자 수요예측을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대신 막대한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온 관행을 뿌리 뽑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 02. 2024년 나라살림 재정 개요

- 지난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11월 30일) 내 종합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 2024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조원이 감액되고 4.5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부안 656.9조원 대비 2,332억원 감액된 656.6조원으로 확정

### □ 자원배분 방향

- ▶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잠재성장률, 경제 역동성 저하,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정건전성은 지키면서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는 적극 뒷받침하는 고차방정식의 해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
- ▶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
- ▶ 구체적인 내용은 ① 따듯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중점을 두었음

### □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

#### ○ [총수입] 전년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13.5조원]

- ▶ 국세수입은 금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3년 예산 대비 △33.2조원 감소 ('23년 예산 400.5 → '24년 367.3조원)
- ▶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9.7조원 증가('23년 예산 225.2 → '24년 244.9조원)

#### ○ [총지출]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 [+17.9조원]

- ▶ '24년 총지출은 '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6조원(+17.9조원)으로 편성

- ▶ 국채발행으로 지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높은 재정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
- ▶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과감하게 재투자

【2024년도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23	2024	증 감		비고
			전년대비	증가율	
<b>총수입</b>	<b>625.7</b>	<b>612.2</b>	<b>△13.5</b>	<b>△2.2</b>	
- 예산(세입)	425.4	395.5	△29.9	△7.0	일반+특별회계
- 기금(수입)	200.3	216.7	16.4	8.2	
<b>총지출</b>	<b>638.7</b>	<b>656.6</b>	<b>17.9</b>	<b>2.8</b>	
- 예산(세출)	441.1	438.3	△2.8	△0.6	일반+특별회계
- 기금(지출)	197.7	218.4	20.7	10.5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3%p 악화(△0.6→△1.9%)
-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3%p 악화(△2.6→△3.9%)
-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0.6%p 증가(50.4→51.0%)

【2024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조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 감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3.1 (△0.6%)	△44.4 (△1.9%)	△31.3 (△1.3%)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8.2 (△2.6%)	△91.6 (△3.9%)	△33.4 (△1.3%)
국가채무 (GDP 대비)	1,134.4 (50.4%)	1,195.8 (51.0%)	+61.4 (+0.6%)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임

## ○ 분야별 예산

- ▶ 2024년도 예산의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2.9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일반·지방행정(110.5조원), 교육(89.8조원), 국방(59.4조원) 순으로 나타남

【2024년도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전년대비	증가율
총지출 (지방교부세·금 제외)	<b>638.7</b> <b>(487.7)</b>	<b>656.6</b> <b>(521.0)</b>	<b>+17.9</b> <b>(+33.3)</b>	<b>+2.8</b> <b>(+6.8)</b>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2. 교 육(교부금 제외)	96.3 (20.5)	89.8 (20.9)	△6.5 (+0.4)	△6.7 (+2.1)
3.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
4. 환 경	12.2	12.5	+0.3	+2.0
5. R&D	31.1	26.5	△4.6	△14.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8.0	+2.0	+7.7
7. SOC	25.0	26.4	+1.4	+5.8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4.3
9. 국 방	57.0	59.4	+2.4	+4.2
10. 외교·통일	6.4	7.5	+1.1	+17.7
11. 공공질서·안전	22.9	24.4	+1.5	+6.5
12.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112.2 (36.9)	110.5 (43.8)	△1.7 (+6.9)	△1.4 (+18.8)

## ○ 부처별 총지출 규모

- ▶ 2024년도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조 3,779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95조 7,888억원), 행정안전부(72조 4,474억원), 국토교통부(60조 9,439억원), 국방부(43조 3,523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03.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개요

- 지난 2023년 11월 3일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11.24 ~ 12.4.)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12.6~12.14)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68억원(△4.83%) 감소한 1조 9,060억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대비 △2,466억원(△49.26%) 감소한 2,539억원임

####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개요

##### ○ 편성방향

- ▶ (전략적 재정운용) 불투명한 재정여건 속에서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적극편성 하였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
- ▶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성 강화) 연내 집행가능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으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고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지원중단 등 세출구조조정 실시

##### ○ 본예산 편성규모

- ▶ '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조 28억대비 △968억원(△4.83%) 감소한 1조 9,060억원
- ▶ (일반회계) 전년도 본예산 1조 5,956억원 대비 △290억원(△1.82%)감소한 1조 5,669억원
- ▶ (특별회계) 전년도 본예산 4,069억원 대비 △678억원(△16.66%)감소한 3,391억원

#####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구성비	'23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060	100.0%	20,028	100.0%	△968	△4.83%
지 방 세 수 입	8,518	44.69%	8,720	43.54%	△202	△2.32%
세 외 수 입	1,795	9.42%	2,284	11.40%	△489	△21.39%
지 방 교 부 세	1,254	6.58%	978	4.88%	276	28.25%
보 조 금	4,233	22.21%	3,954	19.74%	279	7.06%
지 방 채	406	2.13%	8	0.04%	398	5310.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53	14.97%	4,085	20.40%	△1,232	△30.15%

-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5,66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억원(△1.82%) 감소하였는데, 세외수입(+75억원)과 지방교부세(+276억원), 보조금(161억원), 지방채(+294억원)는 증가하였지만, 지방세(△202억원)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895억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77억원(△14.07%), 지방소비세 △161억원(△6.12%), 지방교육세 △27억원(△5.43%) 등이 주요 감소사유임
-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는 75억원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3년 640억원)이 일몰되어 △489억원 감소함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177억원)은 증가하였지만, 예수금수입(△1,337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232억원) 등이 크게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23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합 계	19,060	100.00%	20,028	100.00%	△968	△4.83%
일 반 공 공 행 정	1,474	7.73%	1,376	6.87%	98	7.11%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155	6.06%	1,071	5.35%	84	7.81%
교 육	925	4.85%	894	4.46%	31	3.42%
문 화 및 관 광	647	3.40%	871	4.35%	△224	△25.69%
환 경	2,101	11.02%	2,956	14.76%	△854	△28.90%
사 회 복 지	5,298	27.80%	5,502	27.47%	△203	△3.69%
보 건	332	1.74%	365	1.82%	△33	△9.16%
농 립 해 양 수 산	1,030	5.41%	843	4.21%	187	22.20%
산 업·중 소 기 업 및 에 너 지	427	2.24%	657	3.28%	△230	△34.97%
교 통 및 물 류	1,243	6.52%	1,085	5.42%	158	14.5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628	8.54%	1,805	9.01%	△178	△9.84%
과 학 기 술	86	0.45%	71	0.35%	15	21.66%
예 비 비	125	0.65%	123	0.62%	1	1.14%
기 타	2,590	13.59%	2,410	12.03%	180	7.47%

- ▶ (문화 및 관광) 전년 대비 △224억원(△25.69%) 감소한 647억원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운영 140억원, 위탁체육시설 운영 37억원, 전국규모대회 개최 유치 및 참가 19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반다비 빙상장 건립('23년 110억원), 장육진생가기념관 건립('23년 26억원), 금강누정선유길 개발('23년 19억원) 등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함
- ▶ (환경) 전년 대비 △854억원(△28.9%) 감소한 2,101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483억원, 상수도사업 예탁금 △395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7,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93억원 등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함
- ▶ (사회복지) 전년 대비 △203억원(△3.69%) 감소한 5,298억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753억원, 부모급여 지급 450억원, 영유아보육료 380억원, 아동수당 지원 31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시비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함
- ▶ (농림해양수산) 전년 대비 187억원(22.2%) 증액된 1,030억원으로 학교급식지원 277억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98억원, 농업인 수당 지원 39억원, 산림자원관리 31억원 등의 사업이 전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전년 대비 △230억원(△34.97%) 감소한 427억원으로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운영·조성비 △71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18억원 등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 검토사항

- ▶ 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던 예산규모도 경기 침체와 재정수요가 함께 높아지는 재정압박의 상황 속에서 전년 대비 △968억원 감소하였음
- ▶ '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 또는 일괄 삭감되어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의 추경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 본예산 편성 후에도 사업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분석, 재정사업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 노력이 필요함
- ▶ 경기침체와 재정수요가 함께 높아지는 재정압박의 상황 속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의 세입부족에 활용 가능한 비상재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로, 장기적인 세입 확충방안 마련과 대폭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우리 시의 역량을 모아 지속·심화되는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임

## □ 기금운용계획

### ○ 기금운용계획 규모

- ▶ '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3년 당초 계획 대비 △2,466억원(△49.26%) 감소한 2,539억원임
- ▶ 주요 증감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77억원(3,584→1,007), 지역개발기금 70억원(692→763),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원(69→48) 등으로 예치금회수와 예수금, 예탁금과 예치금이 크게 감소함

### [ 기금별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계획		전년도 당초계획		증감액	
	2024년 계획	구성비	전년도 당초계획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539	100.0%	5,005	100.0%	△2,466	△49.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7	39.65%	3,584	71.61%	△2,577	△71.91%
지역개발기금	763	30.03%	692	13.83%	70	10.17%
재난관리기금	227	8.95%	230	4.59%	△3	△1.13%
재해구호기금	159	6.25%	130	2.59%	29	22.26%
남북교류협력기금	12	0.49%	12	0.24%	0.04	3.26%
자활기금	11	0.42%	10	0.20%	0.04	4.31%
양성평등기금	10	0.40%	17	0.35%	△7	△41.02%
식품진흥기금	17	0.66%	16	0.32%	0.07	4.33%
중소기업육성기금	48	1.88%	69	1.38%	△21	△30.85%
투자진흥기금	191	7.52%	124	2.48%	67	53.58%
농업발전기금	84	3.32%	96	1.91%	△11	△11.78%
옥외광고발전기금	7	0.27%	11	0.22%	△4	△37.77%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8	0.11%	3.3	0.07%	△0.6	△16.97%
고향사랑기금	1.3	0.05%	-	-	1.3	순증

## 04. 2024년 세종특별자치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개요

- 세종시교육청 예산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원 대비 447억원(4.02%) 증가한 1조 1,062억원임
- 2024년도 운용할 기금은 전년도 당초계획 5,132억원 대비 △119억원(△2.32%) 감소한 5,013억원임

###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 편성방향

- ▶ 세종교육 비전을 위한 5대\* 정책목표별 이행과제 예산 적극 반영
  - \*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교육행정
-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 지원
- ▶ 예산심사 강화를 통한 건전 예산 편성으로 재정 책무성 강화

#### ○ 예산 편성 규모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원 대비 447억원(4.02%) 증가한 1조 1,062억원

####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23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b>합 계</b>	<b>11,062</b>	<b>100.0</b>	<b>10,615</b>	<b>100.0</b>	<b>447</b>	<b>4.2</b>
중앙정부이전수입	8,335	75.3	9,468	89.2	△1,133	△12.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37	9.4	1,060	10.0	△23	△2.2
기 타 이 전 수 입	11	0.1	17	0.2	△5	△31.1
교수학습활동수입	3	0.0	3	0.0	1	23.1
행 정 활 동 수 입	5	0.0	5	0.0	1	17.6
자 산 수 입	0.001	0.0	0.001	0.0	0	2.3
이 자 수 입	13	0.1	12	0.1	1	5.6
기 타 수 입	1.2	0.0	1.1	0.0	0.2	15.4
전 년 도 이 월 금	50	0.5	50	0.5	-	0.0
전 입 금	1,606	14.5	-	0.0	1,606	순증

- ▶ (이전수입) 기정예산액 1조 544억원 대비 1,161억원 감소한 9,383억원
  - 중앙정부이전수입(△1,133억 12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3억 41백만원), 기타이전수입(△5억 18백만원)
- ▶ (자체수입) 기정예산액 20억원 대비 2억원 증가한 22억원
  - 교수활동수입(58백만원), 행정활동수입(80백만원), 자산수입(3백만원), 이자수입(68백만원), 기타수입(16백만원)

○ 세출예산(정책사업별)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구성비	'23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b>합 계</b>	<b>11,062</b>	<b>100.0</b>	<b>10,615</b>	<b>100.0</b>	<b>447</b>	<b>4.2</b>
인 적 자 원 운 용	98	0.9	91	0.9	7	8.1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618	5.6	789	7.4	△171	△21.6
교 육 복 지	564	5.1	547	5.2	17	3.1
보 건 급 식	404	3.7	325	3.1	79	24.3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1,098	9.9	954	9.0	145	15.2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1,193	10.8	963	9.1	230	23.9
평 생 교 육	7.4	0.1	7.1	0.1	0.3	5.0
교 육 행 정 일 반	277	2.5	315	8.2	△38	△12.0
기 관 운 영	217	2.0	147	3.0	70	47.7
재 무 활 동	110	1.0	410	3.9	△300	△73.2
예 비 비 및 기 타	62	0.6	41	0.4	21	50.9
인 건 비	6,412	58.0	6,026	56.8	386	6.4

- ▶ (인적자원운용)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90억원 대비 7억원 증가한 98억원
  - 교직원 복지지원(42억원), 교직원인사(32억원), 교직원역량강화(23억원)을 반영함
- ▶ (교수학습활동지원)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789억원 대비 170억원 감액한 618억원
  - 학교정보화(151억원), 교육과정운영(141억원), 특수교육(60억원) 등을 반영함
- ▶ (교육복지) 전년도 본예산액 547억원 대비 17억 원 증가한 564억원
  - 교육복지지원(498억원),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50억원), 학비지원(13억원), 농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1억원)을 반영함

- ▶ (보건급식) 전년도 본예산액 325억원 대비 79억원 증가한 404억원
  - 보건관리(32억원), 급식관리(371억원)을 반영함
- ▶ (학교재정지원관리) 전년도 본예산액 953억원 대비 144억원 증가한 1,098억원
  - 학교운영비지원(1,044억원), 사학재정지원(53억원)을 반영함
- ▶ (학교시설여건개선) 전년도 본예산액 962억원 대비 229억원 증가한 1,192억원
  - 학생배치시설(912억원), 학교시설개선(279억원)을 반영함
- ▶ (평생교육) 전년도 본예산액 7억원 대비 0.3억원 증가한 7억원
  - 평생교육운영(5억원), 독서문화(2억원)을 반영함
- ▶ (교육행정일반) 전년도 본예산액 314억원 대비 37억원 감소한 276억원
  - 학생배치계획(78억원), 시설사업관리(74억원),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74억원) 등을 반영함
- ▶ (기관운영) 전년도 본예산액 147억원 대비 70억원 증가한 217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176억원), 기본운영비(40억원)을 반영함
- ▶ (재무활동) 전년도 본예산액 410억원 대비 300억원 감소한 110억원
  - 지방채상환및리스료(109억원), 내부거래지출(1억원)을 반영함
- ▶ (예비비및기타) 전년도 본예산액 40억원 대비 20억원 증가한 61억원
- ▶ (인건비) 전년도 본예산액 6,026억원 대비 385억원 증가한 6,412억원
  - 공무원인건비(5,018억원), 근로자인건비(1,394억원)을 반영함

##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계획		전년도 당초계획		증감액	
	계	구성비	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13	100.0%	5,132	100.0%	△119	△2.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73	89.22%	4,610	89.83%	△137	△2.9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40	10.78%	522	10.17%	18	3.49%

## II. 재정 이슈

### 요 약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지방재정 부담 완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 기대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제1차 종합계획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
-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 **[재정 뉴스]**

# 0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지방재정 부담 완화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 기대

##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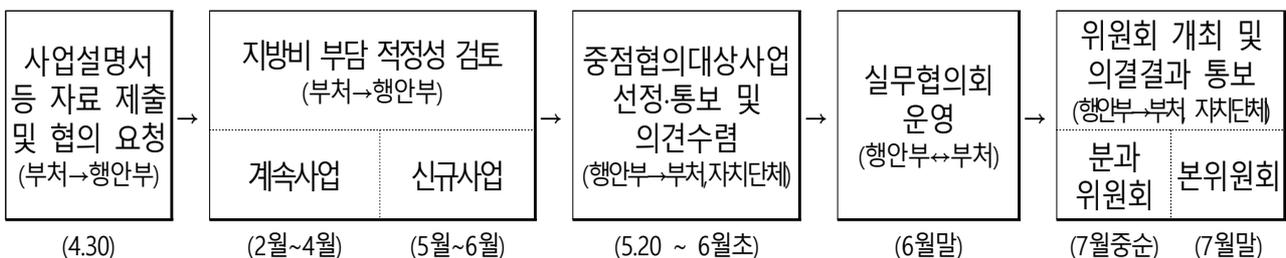
### ○ 지난 2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유사기능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위원장)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
- ▶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

### ○ 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 등 논의·심의

-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함
- ▶ 지방비 부담 협의절차 개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 >



## 0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출처·링크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1차지방시대종합계획('23~'27)'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10.23.)과 국무회의 심의(10.30.)를 거쳐 확정
-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

### □ 주요내용

#### ○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2023.11.1.)

- ▶ 지난 2023년 9월 14일에 발표한 '지방시대 5대 전략'에 기반하여 17개 부처·청, 17개 시·도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 구성하였으며, 중앙부처는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
- ▶ 시·도에서도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구현을 계획
- ▶ 동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포함됨

#### ○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맞춤형 생활복지 등

#### ○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 ①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 ②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 ③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 ④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 ⑤ 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 ⑥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 사도 지방시대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세종

- ◆ 행정수도 완성 및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육성
- ◆ 창의적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세종형 한글·문화 특화 도시 구현

#### ◆ 5대 전략별 역점과제

##### <전략 1>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 자치분권 도시,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화형 지방주도적 발전모델 마련 : 특별자치시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세종시법 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 <전략 2>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도시, 세종

-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 :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대학 육성
-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지방시대를 선도할 거점대학 육성 :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전략 3>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적 혁신성장 도시, 세종

-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 :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 육성, 지역투자촉진
- 디지털트윈, 미래모빌리티 등 세종형 혁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시티 조성, 드론 실증도시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등 추진
-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및 지역발전 선도 : 벤처밸리·스마트그린·복합·전동 일반산업단지 및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추진

##### <전략 4>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화발전 도시, 세종

-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등을 통한 자생적 창조역량 및 자족기능 강화 : 글로벌청년창업빌리지(예: 양자기술창업 허브공간 퀀텀빌리지) 조성,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 한글, 금강(비단강)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관광기반 구축 및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한글문화단지 및 4대 관문 조성,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세종 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세종 문학관 조성
- 대중교통 중심도시 실현 및 미래전략수도에 걸맞은 도로 교통망 구축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서울·세종-청주 고속도로, 대중교통 확산 인센티브제

##### <전략 5>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회의 도시, 세종

-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완성 기반 조성 :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세종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주민주도의 특성화된 미래마을 조성 : 세종 미래마을 조성(빈집 정비 등),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 저출산에 대응하는 세종형 보건·복지체계 강화 및 중부권 의료 허브도시 도약 :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 03.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출처·링크 [농림수산축산부 보도자료\(2023.12.10.\)](#)

-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 추진배경

- ▶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

## □ 주요내용

### ○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시 특례 도입

- ▶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을 도입하고, 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 가능하도록 함

###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

- ▶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조치의 범위를 ‘철거’에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확대하고,
- ▶ 빈집 소유주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직권조치를 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보다 많을 시 철거 등으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 특정빈집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 신설

## 04.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출처·링크 [국회에산정책처, 분석보고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재정지원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2,225로 OECD평균(\$18,105)대비 67.5%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으로 나타남
  - ▶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 \$15,148로 OECD평균(\$11.352) 대비 133.4% 수준
  -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 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스 2개국임
-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사업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 국립대학 육성·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성과지표 발굴 등 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 필요
  - ▶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 모색 필요
-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해 지고 있음

## 의정활동 참고사항

### ○ 정책 여건 및 정책 성과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추진 필요

- ▶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의 취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건, 다른 고등교육 투자사업과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시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고등교육에 지자체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임

### 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Ⅰ



※ 2025년부터 5개 사업(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

### ○ 시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 선정 방안 마련 필요

- ▶ '글로벌대학30' 사업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 ▶ 지난해 1차년도 글로벌대학 사업선정에는 강원도, 부산, 경상도, 충청도 등만 포함되고,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 충청남도 소재 대학은 한곳도 선정되지 못함

※ 1차에서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한국영상대가 신청하였으나 탈락했으며, 홍익대 조치원캠퍼스는 법인이 서울 캠퍼스와 동일하여 신청하지 못함

- ▶ 1,000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 선정을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차 탈락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2차 선정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05. 재정 뉴스

---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이자수입 100억 전망 [\[세종특별자치시, 2024.1.26\]](#)
- 내달 1일부터 1년간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 재정 여건 개선 도움
  - ▶ 지난해 말부터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 등 논리와 지정 당위성을 강조 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한 노력 지속
  - ▶ 2024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약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
- 이번 이자수입 발생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된 세목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2024.1.31.\]](#)
-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추진
  - ▶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
  -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에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추진
-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
- 그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2024.2.1.\)](#)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
  - ▶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 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 허용
  - ▶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
-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 명문화**
  - ▶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계획인지 알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구체화**

□ **세종시교육청, 재정집행 눈부신 성과 보통교부금 총 60억원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2.5\]](#)

-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 10억원, 1년간 재정집행 분야 50억원 확보**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년도 집행실적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와 1년간 재정집행 분야의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여 교육부로부터 60억원의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
-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 조직**
  - ▶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의 체계적 운영으로 주간 집행실적 및 월간 집행실적 등 사업 집행 추진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
  - ▶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
- ※ 2024년 말까지 진행하는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 목표 달성을으로 30억원의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추진 중
-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2024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할 것**

□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2024.2.6.]

-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공유
  - ▶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 활용 논의
-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과 합동현장점검 실시
-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 되는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

□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2024.2.8.]

- 마감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
  - ▶ 총 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
  - ▶ 총 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
  - ▶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하여 전년(9.1조원)대비 6.5조원 감소
    -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
-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
  - ▶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 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
  - ▶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6.8조원)과 유사한 수준
-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 기여율(29%)을 기록

## III. 재정 정책

### 요 약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2024년 국회 심의가 끝났으나, 총 지출기준 증감액 리스트 공개 및 분석이 안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하여 그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여건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 재정 간 연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2023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은 여야간 예산안 관련 재정 합의 후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 5건은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은 제2차 본회의(2023.12.21.)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주로 집중되어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 재정건전성 문제,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유통 관리의 적정성 등 분석

# 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그 체계와 운용을 분석하고 관련된 쟁점사항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의 발전 도모

##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기능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해 정부 간 재정격차를 형평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정교부금이 있음

### ○ 지방교부세 목적 및 기능

-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큰 재원으로,
-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 지방교부세 관련 쟁점사항

- **(재정부족 충족의 어려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재정격차 조정의 불충분)**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격차를 형평화하는 역할에 다소 부족함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확충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만을 더 받으려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부족)** 지방교부세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용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음

##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재정보전 기능 강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확대해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에 이바지
- **(도덕적 해이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노력의 성과를 (가칭)성과교부세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의정활동 정책제언

-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위한 자주 자원 확대 필요**
  - ▶ 자체수입을 기반으로 재정력을 강화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므로 지방세를 근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 ▶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조세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불균형이 상당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감소하는 추세로,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 지방교부세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큰 재원으로 세종시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세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음

○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2024년도 세종시 본예산 기준 지방교부세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세종시의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한참 부족한 상황임
- ▶ 세종시의 지방세는 줄고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세종시법 재정 특례로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고 있으나 재정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시·도별 재정현황】 \*2023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억원,%)

구 분	자체수입	자주재원	자치단체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당초]	재정자립도 [당초]
서울계	281,090	6,746	372,958	77.18	75.37
부산계	64,285	17,510	139,870	58.48	45.96
대구계	46,526	16,992	98,193	64.69	47.38
인천계	62,939	15,066	120,044	64.98	52.43
광주계	27,015	14,529	63,842	65.07	42.32
대전계	25,818	13,575	61,007	64.57	42.32
울산계	24,413	8,901	49,009	67.98	49.81
<b>세종계</b>	<b>8,832</b>	<b>978</b>	<b>15,444</b>	<b>63.52</b>	<b>57.19</b>
경기계	295,321	42,173	488,154	69.14	60.5
강원계	35,083	65,371	138,006	72.79	25.42
충북계	35,012	39,874	109,087	68.65	32.1
충남계	50,919	52,538	151,445	68.31	33.62
전북계	35,571	64,640	149,372	67.09	23.81
전남계	43,531	79,898	182,416	67.66	23.86
경북계	56,091	100,295	221,348	70.65	25.34
경남계	68,975	68,502	204,880	67.1	33.67
제주계	19,067	21,060	57,230	70.12	33.32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시도별 평균으로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당초예산 기준)

## 02.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안 모색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106호](#)

□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인구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을 탐색

### □ 지방교육재정 현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 지방교육재정의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내국세 및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세 전출금의 증가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을 빠르게 증가해옴
- ▶ 교육청의 부채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감소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설치하여 적립하고 있음

### □ 미래 지방재정 여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의무지출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과다 지출에 따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악화되는 한편,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요소로 작용
- ▶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 지방교육재정의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

○ 내국세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학생수, GDP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개편하는 방안 등 제시

○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출금의 탄력적 운용 모색

- ▶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안정적 확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량지출에 대한 통제

-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 경비보조금 지출을 지양해야 함

## 의정활동 정책제언

### ○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 필요

- ▶ 지난 5년간 세종시교육청의 자치단체이전수입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세입 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세종시 신설학교 설립이 안정단계에 도달하면서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임
- ▶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시의 세입기반은 악화되고 복지지출 등 세출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였으나, 교육청 재정의 경우 내국세 및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되어 있어 다소 안정적인
- ▶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학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 환경변화, 국가의 재정 여력, 복지 등 타 분야와의 자원배분의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학생수 또는 GDP 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회복지, 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하여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5년간 자치단체이전수입(세종시→세종시교육청)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9,826	12.9	131,929	12.7	124,225	9.9	102,906	9.5	103,696	9.4
법정이전수입(의무)	94,145	11.0	127,169	12.3	119,652	9.6	98,212	9.1	99,041	9.0
지방교육세전입금	45,202	5.3	67,694	6.5	69,874	5.6	51,515	4.8	54,521	4.9
시도세전입금	22,394	2.6	29,953	2.9	31,767	2.5	27,060	2.5	27,050	2.4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2,229	1.4	14,162	1.4	1,093	0.1	2,179	0.2	208	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3,959	1.6	14,820	1.4	16,351	1.3	16,817	1.6	16,554	1.5
교육급여보조금	101	0.0	111	0.0	121	0.0	162	0.0	169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60	0.0	430	0.0	446	0.0	480	0.0	539	0.0
비법정이전수입(재량)	15,681	1.8	4,760	0.5	4,573	0.4	4,694	0.4	4,655	0.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5,681	1.8	4,760	0.5	4,573	0.4	4,694	0.4	4,655	0.4

# 03.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성 분석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논집자료 제28권 제2호\(2023. 8\)](#)

□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주로 집중되어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 재정건전성 문제,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유통 관리의 적정성 등 분석

## □ 분석 배경

- ▶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산
- ▶ 최근 운영상 문제점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 증가로 인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정부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 광역-기초 간 상품권 중복발행, 부정 유통 등이 지적됨
- ▶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권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운영비 등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부정 유통 관리의 적정성 등을 분석

## □ 주요 분석내용

- ▶ 정부의 재정지원 분야에서 낙후 지역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 기준과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국비 지원금이 인구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더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자치단체의 운영비 분야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판매액 당 운영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운영대행사의 수수료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운영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부정유통 관리 분야에서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 구축과 사후 적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 자치단체 간 운영자금의 귀속 및 관리 부분에서 관리부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세외수입 처리하고 협약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의정활동 정책제언

### ○ 지역화폐 운영의 한계점

-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기반하여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활용한 소비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규모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되면 좋겠지만,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적 지원규모가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된다면 이를 활용한 소비활동이 저조해질 수 있음
- ▶ 세종시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의 캐시백을 유지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2023년도에는 7%, 2024년도에는 5%로 감소하였음.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폐지와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민전 캐시백 혜택규모과 월별 충전금액 등이 얼마나 축소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 여민전이 지속 가능한 지역 내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고려한 운영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개선방안

- ▶ 재정적 지원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여민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더욱 높은 곳에 차별화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 공동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 사용자 편의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민전 도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민전 사용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 ▶ 여민전의 운영 방향성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도입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민전 유통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개선기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여민전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검토한 뒤, 성숙기에는 지역 공동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운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임
- ▶ 세종시 지역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여민전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상황 변화를 고려한 운영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

## IV. 경제 동향

### 요 약

- **[정부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생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 **[정부 재정동향]** '23.1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원 감소한 529.2조원,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3.8조원 감소한 548.6조원
- **[KD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KDI 경제전망]**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NABO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2023년 12월중 제조업 생산은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수출·소비·투자는 지표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 01. 정부 경제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2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생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 ▶ 대외적으로는 업황 개선 기대와 함께 세계경제 연착륙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 지속
  - ▶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철저한 잠재 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노력 병행
  
- **'23. 1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는 증가, 소매판매, 건설투자는 감소**
  - ▶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Delta$ 0.6%, 전년동월비 6.2%),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0.2%)이 모두 증가하여 초산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1.1%) 증가
  - ▶ 지출은 설비투자(전월비 5.5%, 전년동월비  $\Delta$ 5.9%)는 증가, 소매판매(전월비  $\Delta$ 0.8%, 전년동월비  $\Delta$ 2.2%), 건설투자(전월비  $\Delta$ 2.7%, 전년동월비  $\Delta$ 1.2%)는 감소
  - ▶ 소비자심리<'24.1월 CSI 101.6(전월대비 1.9p)>는 상승, 기업심리 중 실적<전산업 BSI '24.1월 실적 69(전월대비  $\Delta$ 1p)>은 하락, 전망<전산업 BSI 2월 전망 69(전월대비 1p)>은 상승
  - ▶ '23.12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전월대비  $\Delta$ 0.3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상승(전월대비 0.1p)
  
- **'24. 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물가는 상승폭 축소**
  - ▶ '24.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23.12월 28.5만명  $\rightarrow$  '24.1월 38.0만명),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 '23.12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 축소(23.11월 3.3%  $\rightarrow$  12월 3.2%),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8%,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3.1%, 생활물가지수는 3.7% 상승
  
- **'24. 1월 중 금융시장은 美 연준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는 하락**
  - ▶ '24.1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 02. 정부 재정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 '23.1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원 감소한 529.2조원
  - ▶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51.9조원 감소한 344.1조원
    -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 △12.9조원, '22~'23.1 기업실적 감소 등으로 법인세 △23.2조원,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7.9조원, 수입감소 등에 따라 관세 △3.0조원 등
  - ▶ (세외수입)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금융영업이자수입 증가(+1.5조원) 등으로 전년(30.8조원) 대비 2.3조원 감소한 28.5조원. 다만, 예산 대비로는 3.5조원 증가
  - ▶ (기금수입) 보험료수입 증가(+6.7조원), 법정부담금 증가(+1.2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5조원 증가한 180.0조원
  
-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3.8조원 감소한 548.6조원
  - ▶ (예산)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2조원 감소
  - ▶ (기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2조원 감소
  
- 통합재정수지는 19.5조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
  
- '23.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0조원 증가한 1,109.5조원
  -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6조원(발행 161.7조원, 상환 83.1조원), 주택채 잔액은 1.6조원(발행 12.3조원, 상환 13.9조원), 외평채 잔액은 0.4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0조원 순증
  
- '24.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5조원(경쟁입찰 기준 11.0조원)
  - ▶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 ▶ 24.1월 국고채 발행량은 12.5조원으로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상승

## 03. KDI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월호](#)

###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
- ▶ 이와 같은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는 생산부문에도 반영되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임. 한편, 중동지역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 주요 경제지표

- ▶ (경기) 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로 다수의 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 완화에 기여
- ▶ (소비) 상품소비가 감소하고 서비스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소비 부진이 지속
- ▶ (설비투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
- ▶ (건설투자)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둔화되는 모습
- ▶ (수출)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
- ▶ (노동시장)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높았던 고용 증가세가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
- ▶ (물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도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크게 축소
- ▶ (금융시장)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주요 위험지표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모습
- ▶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 (세계경제)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04. KDI 경제전망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24년 2월](#)

-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민간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1.8%)보다 소폭 낮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하게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1.4%)는 부동산경기 하락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1.0%)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총수출은 반도체경기 반등과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3.8%)보다 높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수출 회복세는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전망(430억달러 내외)을 상회하는 560억달러 내외의 흑자로 전망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전망
  - ▶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반영하여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기존 전망(21만명)과 유사한 22만명으로 예상됨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거나, 중국경기가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
  - ▶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 상승, 운송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제약될 수 있음
  - ▶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대내적으로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건설 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05. 경제전망 요약표

출처·링크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월호](#)

경제전망 요약표(2024.2월)								
	2022	2023		2024 <sup>1)</sup>			2025 <sup>1)</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b>&lt;전망의 주요 전제&gt;</b>								
세계경제 성장률(%) <sup>1)</sup>	3.4	3.0	3.1	3.1	2.6	3.3	3.0	3.1
• 미국	1.9	2.0	3.0	2.5	2.8	1.3	2.0	1.7
• 유로지역	3.4	0.9	0.0	0.5	0.3	1.1	0.7	1.7
• 중국	3.0	5.5	5.1	5.2	4.5	4.6	4.6	4.5
• 일본	1.0	2.4	1.3	1.9	0.2	1.5	0.9	0.9
세계교역 신장률(%) <sup>1)</sup>	5.0	0.4	0.3	0.4	2.3	4.1	3.2	3.6
브렌트유가(달러/배럴) <sup>2)</sup>	99	80	85	82	82	83	83	81
<b>&lt;국내경제 전망&gt;</b>								
GDP 성장률(%) <sup>1)</sup>	2.6	0.9	1.8	1.4	2.2	2.0	2.1	2.3
• 민간소비	4.1	3.1	0.6	1.8	1.1	2.0	1.6	2.3
• 설비투자	-0.9	5.3	-4.0	0.5	2.6	5.7	4.2	3.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9	0.3	1.6	1.5	2.8	2.2	3.3
• 건설투자	-2.8	1.8	1.0	1.4	-2.4	-2.9	-2.6	-1.0
• 재화수출	3.6	-0.9	6.6	2.9	6.0	3.2	4.5	3.6
• 재화수입	4.3	1.9	-3.0	-0.6	0.1	5.4	2.7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1)</sup>	5.1	3.9	3.3	3.6	2.9	2.3	2.6	2.1
• 근원물가 <sup>3)</sup>	3.6	3.8	3.0	3.4	2.4	2.0	2.2	2.0
경상수지(억달러)	258	11	343	355	198	322	520	590
• 상품수지	156	-34	375	341	280	352	632	776
• 서비스수지	-73	-123	-134	-257	-122	-129	-251	-316
• 본원·이전소득수지	175	168	102	271	40	99	139	130
취업자수 증감(만명) <sup>1)</sup>	82	37	28	33	27	23	25	18
실업률(%)	2.9	3.0	2.4	2.7	3.1	2.7	2.9	2.9
고용률(%) <sup>4)</sup>	62.1	62.2	63.0	62.6	62.5	63.1	62.8	63.0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근월을 기간 평균 기준    3)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4) 15세 이상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Bloomberg, 한국은행								

## 06. NABO 경제동향

출처·링크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제40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부진이 지속되며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 ▶ 고금리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건설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생산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전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23.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
  -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0월)-0.8 → (11월)0.9 → (12월)-0.8
  -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0월)-3.1 → (11월)0.5 → (12월)-0.7
  
- **`24.1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 '24.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546.9억달러, 4개월 연속 증가
  - ▶ '24.1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43.9억달러, 11개월 연속 감소
  
- **`24.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1월)3.3 → (12월)3.2 → ('24.1월)2.8
  
-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 '23.12월 「제조업 생산」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 석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6.7% 증가
  - ▶ '23.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
  - ▶ '23.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0.3% 증가
  
- **`24.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 '24.1월 취업자 수는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년 11개월째 증가세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
  
-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 07.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링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2](#)

□ 2023년 12월중 제조업 생산은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수출·소비·투자는 지표 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2년			2023년							
		연간	12월	4/4	연간	1/4	2/4	3/4	4/4 <sup>p)</sup>	11월 <sup>a)</sup>	12월 <sup>a)</sup>	
제조업 생산	생산지수	4.2	5.1	3.8	-4.4	-5.4	1.5	-6.0	-7.7	-2.8	-11.6	
	출하지수	2.5	-0.2	-1.2	0.9	0.8	3.7	0.1	-1.0	1.7	-5.1	
	재고지수	28.9	28.9	28.9	3.2	28.2	46.3	29.0	3.2	4.3	3.2	
소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sup>1)</sup>	1.7	4.2	3.7	0.8	-5.4	2.1	3.6	3.2	7.4	2.9	
	승용차신규등록대수	-9.0	-19.2	-3.8	6.0	11.2	5.1	6.5	1.5	-3.4	-0.8	
투자	건축착공면적	-45.9	-95.8	-13.5	-56.2	-49.8	-70.7	-21.4	-66.6	-87.4	335.1	
	건축허가면적	-2.5	-32.8	-53.7	-47.6	-43.9	-59.5	-52.2	-17.5	30.5	-4.2	
	자본재수입	-18.5	41.7	18.1	36.9	75.6	64.9	20.5	10.1	-4.4	4.0	
대외거래	수출	5.7	-25.8	-15.5	-23.0	-34.4	-31.7	-23.1	1.1	8.4	11.5	
	수입	26.6	13.3	40.0	-10.8	-9.4	-5.2	-19.5	-9.3	-4.5	2.3	
고용	취업자수증감(천명)	11.9	20.2	17.5	10.8	16.2	12.3	9.5	5.1	3.5	2.9	
	고용률	63.7	63.1	63.9	64.6	63.5	65.7	65.2	64.0	64.0	62.8	

주: 1) 매장면적 3천㎡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 (제조업 생산)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확대
- ▶ (소비)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축소
- ▶ (설비·건설투자)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증가로 전환
- ▶ (수출입)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수출은 증가폭이 확대, 수입은 증가로 전환
- ▶ (고용)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는 증가폭 축소, 고용률은 하락
- ▶ (소비자물가) 2024년 1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에 비해 소폭 둔화(2023.12월 +2.6% → 2024.1월 +2.5%)
- ▶ (주택가격) 2023년 12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하락으로 전환

##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12월	4/4	연간	1월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sup>1)</sup>	5.4	5.1	5.4	3.0	4.8	4.3	2.6	2.4	2.7	2.5	2.6	2.5
주택매매가격 <sup>2)</sup>	-14.46	-5.00	-8.58	-3.60	-4.14	-7.15	2.40	1.52	-0.12	0.04	-0.26	..
주택전세가격 <sup>2)</sup>	-17.61	-4.85	-8.70	-2.74	-4.22	-7.50	0.82	2.19	2.06	0.83	0.27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 V. 재정 통계

### 요 약

- [주요 경제지표] 고용, 생산, 소비, 부동산, 수출입, 금융, 지역특성 통계자료
- [세종시 주요 통계] 기본현황, 재정·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소방·안전
-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 설립현황, 재정현황

# 01. 주요 경제지표

출처: 링크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12월호

**고 용** |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3. 11.

세 종	전국	대전	충북	충남
<p>↑ 1.9% 210천명 경제활동인구</p>	<p>↑ 1.0% 29,375천명</p>	<p>↑ 0.6% 823천명</p>	<p>↑ 1.0% 964천명</p>	<p>↑ 2.2% 1,316천명</p>
<p>↑ 1.5% 207천명 취업자수</p>	<p>↑ 1.0% 28,698천명</p>	<p>0.0% 804천명</p>	<p>↑ 0.5% 946천명</p>	<p>↑ 1.4% 1,285천명</p>
<p>↑ 0.4%p 1.3% 실업률</p>	<p>0.0%p 2.3%</p>	<p>↑ 0.7%p 2.4%</p>	<p>↑ 0.5%p 1.9%</p>	<p>↑ 0.6%p 2.3%</p>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3. 11.

세 종	전국	대전	충북	충남
<p>↓ 3.1% 109.7 광공업생산지수</p>	<p>↑ 5.3% 112.5</p>	<p>↓ 3.3% 104.8</p>	<p>↓ 0.5% 108.5</p>	<p>↓ 4.4% 108.7</p>
<p>↑ 1.8% 112.0 광공업출하지수</p>	<p>↑ 6.9% 110.3</p>	<p>↑ 1.2% 108.0</p>	<p>↓ 0.5% 110.3</p>	<p>↑ 2.3% 110.6</p>
<p>↑ 3.3% 138.9 광공업재고지수</p>	<p>↑ 3.1% 118.6</p>	<p>↑ 2.1% 141.7</p>	<p>↓ 5.3% 137.0</p>	<p>↑ 32.3% 175.4</p>
<p>↑ 4.7% 64.6 소상공인 체감지수</p>	<p>↑ 11.5% 63.6</p>	<p>↑ 20.6% 63.1</p>	<p>↑ 9.7% 63.9</p>	<p>↑ 17.6% 66.2</p>
<p>↓ 37.4% 86.5 전통시장 체감지수</p>	<p>↑ 15.5% 67.0</p>	<p>↑ 3.4% 79.3</p>	<p>↑ 4.6% 73.4</p>	<p>↑ 7.7% 69.1</p>

**소 비** | 전년동월비/2020=100 23. 11.

세 종	전국	대전	충북	충남
<p>↑ 2.5% 112.24 소비자물가</p>	<p>↑ 3.3% 112.67</p>	<p>↑ 3.1% 112.13</p>	<p>↑ 3.2% 113.45</p>	<p>↑ 3.1% 113.31</p>

부동산 | 전년동월비/2022.1=100

23. 11.



수출입 | 전년동월비

23. 11.



금융 | 전년동월비

23. 10.



지역특성 | 전년동월비

23. 11.

23. 10.



## 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23년 3분기 세종통계분기보](#)

2023년 3분기(7월~9월) 기준



고  
용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b>323</b> 천명	<b>214</b> 천명	<b>110</b> 천명	<b>210</b> 천명	<b>4</b>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64세 고용률	
<b>66.1</b> %	<b>65.0</b> %	<b>1.7</b> %	<b>67.9</b> %	

재  
정  
·  
금  
융  
·  
보  
험

### 총 가계대출 8,564.6 십억원



건  
설  
·  
주  
택  
·  
토  
지

###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 출처 : 국토교통부 (단위 : %)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단위 : %)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지	전	답	임야	기타
2023.3/4	0.117	0.079	0.050	0.157	0.147	0.084	-

###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단위 : %)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
2023. 3/4	0.099	0.056	0.027	0.140	0.122	0.136	0.189	0.165	0.015

### 03.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24. 1.1.자 기준]

#### 1. 연도별 학교 정보 현황

##### ■ 학교 수

(단위: 교, 원)

학교급	설립	2018 (4. 1.)	2019 (4. 1.)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3. 1.)	2023 (9. 1.)	2024 (1. 1.)
유치원	공립	56	58	58	60	62	63	63	63
	사립	3	3	3	2	2	2	2	2
	계	59	61	61	62	64	65	65	65
초등학교	공립	47	49	49	51	52	53	53	53
중학교	공립	23	24	24	26	27	27	27	27
고등학교	공립	16	17	19	20	20	20	20	20
	사립	1	1	1	1	1	1	1	1
	계	17	18	20	21	21	21	21	21
특수학교	공립	1	1	1	1	1	2	2	2
총계	공립	143	149	151	158	162	165	165	165
	사립	4	4	4	3	3	3	3	3
	계	147	153	155	161	165	168	168	168

##### ■ 학급 수

(단위: 학급)

학교급	설립	2018 (4. 1.)	2019 (4. 1.)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3. 1.)	2023 (9. 1.)	2024 (1. 1.)
유치원	공립	372	399	403	418	433	433	434	434
	사립	13	11	11	8	7	5	5	5
	계	385	410	414	426	440	438	439	439
초등학교	공립	1,183	1,328	1,413	1,503	1,587	1,650	1,653	1,653
중학교	공립	461	496	546	610	643	658	658	658
고등학교	공립	354	393	431	456	481	519	519	519
	사립	24	24	24	24	24	24	24	24
	계	378	417	455	480	505	543	543	543
특수학교	공립	28	30	30	34	35	48	48	48
총계	공립	2,393	2,644	2,823	3,025	3,179	3,308	3,312	3,312
	사립	37	37	35	32	31	29	29	29
	계	2,435	2,681	2,858	3,057	3,210	3,337	3,341	3,341

## ■ 학생 수

(단위: 명)

학교급	설립	2018 (4. 1.)	2019 (4. 1.)	2020 (4. 1.)	2021 (4. 1.)	2022 (4. 1.)	2023 (3. 1.)	2023 (9. 1.)	2024 (1. 1.)
유치원	공립	6,147	6,353	6,580	6,474	6,311	6,171	6,207	6,207
	사립	246	188	183	126	111	78	75	75
	계	6,393	6,541	6,763	6,600	6,422	6,249	6,282	6,282
초등학교	공립	24,865	27,892	29,487	30,726	32,230	32,715	32,649	32,649
중학교	공립	10,070	11,202	12,395	13,822	14,809	15,508	15,477	15,477
고등학교	공립	8,047	8,979	9,736	10,305	10,913	11,860	11,746	11,746
	사립	527	496	510	513	571	612	607	607
	계	8,574	9,475	10,246	10,818	11,484	12,472	12,353	12,353
특수학교	공립	132	144	151	175	186	216	229	229
총계	공립	49,261	54,570	58,349	61,733	64,449	66,470	66,308	66,308
	사립	773	684	693	643	682	690	682	682
	계	50,034	55,254	59,042	62,376	65,131	67,160	66,990	66,990

## ■ 교원 수

(단위: 명)

학교급	설립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
유치원	공립	278	389	497	506	561	585	595	588	588
	사립	17	19	18	18	15	12	10	6	6
	계	295	408	515	524	576	597	605	594	594
초등학교	공립	1,253	1,398	1,644	1,744	2,066	2,150	2,222	2,255	2,252
중학교	공립	667	769	884	934	1,018	1,092	1,145	1,129	1,128
고등학교	공립	596	737	801	887	969	1,016	1,062	1,095	1,095
	사립	49	50	50	50	50	48	47	48	48
	계	645	787	851	937	1,019	1,064	1,113	1,143	1,143
특수학교	공립	24	43	47	49	46	47	55	66	66
총계	공립	2,818	3,336	3,873	4,120	4,660	4,890	5,079	5,133	5,129
	사립	66	69	68	68	65	60	57	54	54
	계	2,884	3,405	3,941	4,188	4,725	4,950	5,136	5,187	5,183

※ '16~'23년 교원 수(휴직·파견 교원 포함)이며, 본청 근무 교원 제외



## 2. 학교설립 현황(총괄)

개교연도	유	초	중	고	특목/ 특성화	특수	계	비고
'12	2	2	1	1	-	-	6	개교
'13	2	2	1	1	1	-	7	개교
'14	6	5	3	1	-	-	15	개교
'15	12	8	4	4	1	1	30	개교
'16	3	2	1	1	-	-	7	개교
'17	6	5	4	2		-	17	개교
'18	6	4	2		1	-	13	개교
'19	2	2	1	1	-	-	6	개교
'20	1	1	1	1	1	-	5	개교
'21	1	1	1	1	-	-	4	개교
'22	2	1	1	-	-	-	4	개교
'23	1	1	-	-	-	1	3	개교
계	44	34	20	13	4	2	117	

※ 2022년 솔빛초병설유 설치, 2023년 나루초병설유 개원 포함

## 3. 재정현황

### ■ '24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 총 1조 1,062억 원

세 입			세 출		
과 목	금액(억원)	비율(%)	사업별	금액(억원)	비율(%)
중앙정부이전수입	8,335	75.3	인적자원운용	98	0.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37	9.4	교수학습활동지원	619	5.6
기타이전수입	12	0.1	교육복지	564	5.1
교수학습활동수입	3	0.0	보건급식	404	3.7
행정활동수입	5	0.0	학교재정지원관리	1,098	9.9
자산수입	-	0.0	학교시설여건개선	1,193	10.8
이자수입	13	0.1	평생교육	8	0.1
기타수입	1	0.0	교육행정일반	277	2.5
전년도이월금	50	0.5	기관운영	217	2.0
전입금	1,606	14.5	재무활동	110	1.0
			예비비및기타	62	0.6
			인건비	6,412	58.0
합계	11,062	100	합계	11,062	100